

개원기념 특강

자유한국당

류 석 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신보수주의와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는 지금 ‘체제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체제를 교체하려는 시도입니다.

- 이른바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며 직접민주주의의 역할을 확대하는 모습은 레닌이 강조했던 Democratic Centralism (민주집중제)로 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하는 모습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인사들을 배치해 사법체계가 언제든지 정부와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포석입니다.

- 원전폐기를 추진하는 방식 또한 국회의 견제를 우회하면서 직접 대중을 동원하여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임의기구인 ‘공론화위원회’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르니까? 이는 사실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또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경제로 이끌겠다는 주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케인즈 이론과 맑스주의 이론을 결합하여 2013년 ILO(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임금주도성장론’을 이름만 바꿔 우리나라에 도입한 이론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일상화하는 사회주의적 실험일 뿐입니다.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는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문재인 패싱’이라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을 포함한 여론은 물론 언론의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을 장악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국회만 남아있게 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회무력화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 국회무력화 혹은 국회무시 선택은 헌법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들어 낼 것입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명분으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좌파의 해방구가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의 ‘체제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합니다. 홍 대표가 ‘체제전쟁’을 선두에서 이끌며 문재인과 대립각을 형성해야 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체제전쟁’이라는 빅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보수단합의 기치를 내걸어야 합니다. 보수단합의 큰 명분은 ‘체제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투쟁에 보수는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 ‘박근혜 탄핵 찬반 프레임’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모두 하나같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지키는 일에 나서자고 호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체제전쟁에서 선봉에 서야할 우파보수 정당이 오늘날 궤멸적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 우파보수 정당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선배들에 대한 책임은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미래 세대에 대한 부끄러움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총선 직전까지 당시 새누리당은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과반을 넘어 160석 이상을 전 언론이 예상했었습니다.

-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오만하여 분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한 마케팅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친박’을 넘어 ‘진박 감별사’까지 나서는 등 그 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곳곳에 계파를 우선한 친박인사를 무리하게 공천했습니다.

- 청와대와 당 대표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표가 결정을 미루고 지방으로 잠적하고, 이를 쫓아와 결정을 종용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전 국민의 목전에서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분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피함의 극치였습니다.

- 그 결과 망해가던 진보좌파 운동권정치를 다시 살려 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정치인들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 운동권정치의 부활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과 그 소속의원들의 지리멸렬한 모습은 정말이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많은 일탈이었습니다.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체제전쟁에 나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에서의 사적 공천과 극심한 내부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탄핵정국에 이르게 한 국정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탄핵정국에서 보수정당 분열의 빚장을 스스로 연 분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중심세력으로 보수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외연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끝/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2017년 8월 2일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나라다. 그 정통성을 이어 받은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 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아래의 가치를 담는다.

1.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꾸준히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었다.

2.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3.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4.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대내외적인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목표를 가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수자를 포용하며, 대외적으로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 역시 글로벌 대한민국이 추구할 핵심 가치다.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은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념과 조직의 재정비에 상응해 대대적인 인적혁신과 인재영입 또한 이뤄야 한다.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앞으로 혁신, 통합, 수권(授權)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그 어떤 압력이나 영향도 배제한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이번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날카로운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1차 발표(2017. 8. 15)

◇ 혁신위원회 제1차 혁신안은 당의 '이념과 정책'에 관련된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임

- 1) 국회 선출 및 추천 위원 등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 2) 당 정치학교 개설 및 운영

※ 첨부자료: 1. 국회 선출 및 추천 위원 현황
2. 당 정치학교 프로그램

1) 제1야당 몫 국회 추천 정부위원회 위원 등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 제안배경

- 국회(상임위, 교섭단체, 정당 등)의 추천 형식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일할 위원의 선임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여,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은 물론 위원회 활동에서 당의 정책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이에 당 차원의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회 추천 정부위원회 등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을 통해 당의 정책적 입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의 선임 필요성이 제기됨

□ 혁신안

- 국회(의장) 선출 및 추천 위원, 이사직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의 추천 인사 현황, 임기, 선출 요건 등을 파악하여 적시에 적임의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첨부 자료 1 참조)
-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전문성, 역량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여 야당 추천인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 이들의 역할을 통한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감시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정책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건장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제고함
-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추후 반영

2) 당 정치학교 설치 및 운영방안

□ 제안배경

-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확립하여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역할하기 보다 기득권 유지 등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위기상황에 직면함
- 이에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이념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 당 차원의 '정치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가치 중심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함

□ 혁신안

- 당이 운영할 정치학교의 교육대상은 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의 공천을 받은 자 ② 국회의원 보좌진 ③ 당 사무처 직원 및 당료 ④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
- 이들 가운데 2018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당 정치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
-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공천이 확정되는 즉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는 3박 4일, 그리고 비례를 포함한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후보는 5박 6일의 입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첨부자료 2 참조)
- 정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창구가 되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연의 여의도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정치대학원' 및 연수원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과의 업무 분장 및 통합 폐합 문제는 '당 정치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정리 예정. /끝/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제2차 발표(2017. 8. 23)

◇ 혁신위원회 제2차 혁신안: 정책정당화

1. 당 정책조직 강화
2. 여의도연구원 혁신

1. 당 정책조직 강화

□ 제안배경

-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 예산, 정부 인사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아울러, 우파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당 조직과 구조는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혁신위원회가 진단한 당 정책분야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① 당 정책분야의 두 축인 '당 정책위 전문위원회'과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 당 정책위 전문위원회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의 상당부분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무처 당직자들임
 - 당 정책분야 보직과 당 사무처 보직간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
- ② 당과 소속 의원들 사이의 정책 공유가 원활하지 못함
- ③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 역시 지역구 관리, 정무 업무 등을 겸하는 상황에서 입법 보좌 등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움

□ 혁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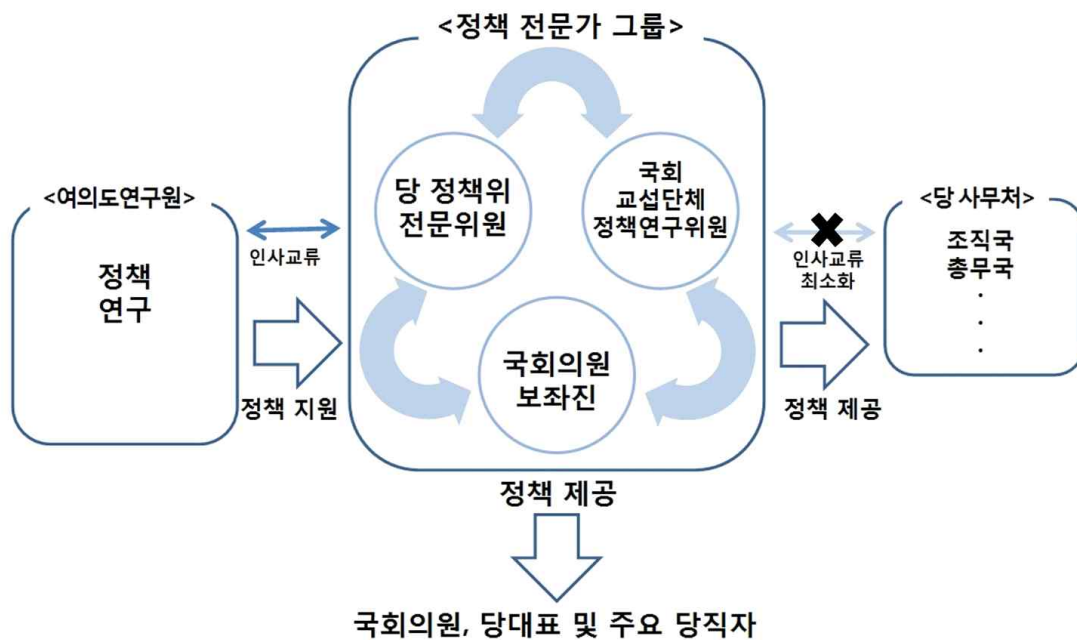
(1) 정책 분야 전문가 육성 및 영입

- 당무(당사무처)와 정책업무('당 정책위 전문위원회실' 및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실')간 인사교류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구, 개발, 평가에 집중하게 하여 정책업무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 육성
- '의원실의 정책담당보좌진', '당 정책위 전문위원회',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 간 순환근무 체제 구축
- '당 정책위 전문위원회실'과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실'에 외부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전문성 제고

(2) 국회 상임위별 정책 TF 구성을 통해 당과 의원실 간 정책공유

- 각 상임위 간사 위원(의원)의 지휘 하에 '상임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 각 1명', '상임위 담당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상임위별 당 정책위 전문위원'들로 정책 TF를 구성하고,
- 최소 주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당과 의원실간 정책 공유' 및 '이슈별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해 당 정책위원회 및 상임위 소속 당 의원들과 공유함
- 이를 통해 당과 소속 의원실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유지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견제 기능 수행.

【그림 1】 당 차원 정책전문가 그룹 상호관계



- 위와 같은 정책 분야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추후 반영.

2. 여의도연구원 혁신

□ 제안배경

-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썹크탱크로서 ① 당 정책 개발 및 홍보 ② 시민 정치교육 ③ 학계·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④ 선거전략 수립 및 여론조사 ⑤ 대중적 정책홍보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 현 연구원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으로는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혁신위가 진단한 연구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① 연구원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연구원이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당 사무처 부속기관으로 전락 ② 박사급 연구위원들의 저조한 연구 실적 ③ 왜곡된 조직구조 및 예산 집행 ④ 외부 전문가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내부 규정의 존재 ⑤ 복잡하고 방만한 조직 구조 등임

□ 혁신안

(1) 연구원 운영정상화

- 당 사무처 조직 원상 복귀
 - ‘17년 2월 당규 개정으로 연구원에 편입된 연수국, 청년국, 여성국 등의 조직을 사무처로 원상 복귀

- 당 정책위 전문위원을 제외한 파견 당직자 사무처 복귀
 - 연구원에 파견된 비정책 분야 인력을 사무처에 복귀시키고, 연구원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인사시스템 재정립
- 연구원의 재정 자율성 확보
 - 법률상 국고보조금 30 %를 정당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의 무화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연구원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

(2) 연구원 인력 운용 혁신

- 정책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한 박사급 연구위원들 에 대한 구조조정
-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개발을 관 리하는 ‘정책관리 행정인력’ 보강
- 정치적 논쟁과 정부 정책에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 로 대응할 ‘정무전문가’ 보강

(3) 연구원 조직 개혁

- 상근부원장(제1부원장) 제도 부활
 - 연구인력에 대한 지휘 및 실무 총괄 책임 부여
 - 복수 상근부원장제 도입 검토 (내부 연구인력 중 상근부원 장을 지원하는 제2부원장 임명)

○ 개방형 채용제도 도입

- 외부 전문가의 원활한 영입을 위해 특별채용방식 개선 및 채용인원 증대

○ 현 5실3센터를 통합하여 3실1팀으로 개편

- 현재 구조(5실3센터): 경제정책실, 사회정책실, 전략기획실, 연구지원실, 여론조사실, 청년정책센터, 여성정책센터, 안보통일센터
- 통합 방안(3실1팀): 정책연구실, 전략기획실, 정치아카데미, 운영지원팀

○ 여론조사실 이전 및 보고체계 일원화

- 여론조사실을 전략기획실 내 여론조사팀으로 이전
- 이원화 되어 있는 보고체계를 일원화

현 행	▶ 여론조사실 → 사무총장 → 최고회의 (공천, 선거, 당무 여론조사)
	▶ 연구원장 → 최고회의 (그외 여론조사)
개 편	▶ 연구원장 → 대표(사무총장) → 최고회의 (모든 여론조사)

(4) 선거 전략 기획 기능 부여

-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지역별 선거 전략 및 정책을 수립
- 선거 공약 개발, 선거 홍보 등 당의 선거캠프 역할 담당

(5) 당헌·당규 반영

- 이상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

/끝/